

이슈브리프 816호
(2026. 3. 6)

독일-중국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제816호

홍건식 hks21c@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2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독일의 메르츠 총리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이후 미-유럽 관계의 급속 악화 속에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상징하는 행보로 평가된다. 메르츠 총리는 "좋은 협력"과 "풍성한 성과"를 강조했다며, 중국 측도 "결실 있는 방문"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내막은 달랐다. 시진핑 주석은 신뢰·혁신·문화 3축 파트너십과 유럽 자율성 지지를 제안했지만, 메르츠 총리는 과잉생산·보조금·핵심 광물 통제·대중 무역 적자·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을 직설 비판하며 "공정 경쟁과 공동 규칙 준수가 필수"라고 경고했다. 이는 독일의 중국에 대한 협력 의지와 디리스크(de-risking) 원칙의 병행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EU가 「원천안보회의 2026」 보고서를 통해 현 국제 질서를 '파괴 중' (Under Destruction)으로 진단한 것과 같이 이번 중독 정상회담은 미-EU 관계에 구조적 긴장이 지속하는 가운데 열렸다. EU는 미국의 압박에 ACI 적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기술 주권 결의안, E6 프레임워크 등으로 대응하며 자강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유럽 국가들의 연이은 방중은 대서양 동맹 유지 속에 중국을 헤징 수단으로 활용해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럽의 중국으로의 중심축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 국가의 방중은 EU의 자강력 강화를 위한 외교 전략 다각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디리스크이라는 현실적 선택으로 비춰진다. 우리는 미국 중심 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EU-G7·중국일본과의 다층적 파트너십으로 경제안보 리스크를 분산하고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유럽 기술 동맹 강화, 믹타(MIKTA)·G7+ 네트워크 활용이 핵심 과제다. 미-중 격랑 속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국익 극대화를 위한 냉철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주제어 : 중국, 독일, 자율성, 경제안보, 실용외교

2026년 2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Friedrich Merz)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 가속화되는 미-유럽 긴장 속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메르츠 총리는 방문 직후 “좋은 협력(good cooperation)”을 강조하며 “풍성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으며,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宁) 대변인도 “결실 있고 의미 있는 방문”으로 규정하며,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성과는 중국의 에어버스 항공기 최대 120대 추가 구매 약속으로, 메르츠 총리는 이를 “이번 방문의 가치가 입증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는 베이징에서 신형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의 자율주행 시연을 직접 체험한 뒤 항저우로 이동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선도기업 유닛트리(Unitree Robotics)를 방문했다. 그는 로봇 시연을 관람하며 기술 협력의 상징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독일 기업(지멘스 에너지 등)과 중국 첨단산업 간 실질적 교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독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러나 디리스크링 원칙은 병행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독일 관계 발전을 위해 (1) 서로를 지지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2) 개방성과 상호 이익을 중시하는 혁신적 파트너, (3) 문화·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의를 쌓는 파트너를 세 가지 축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시 주석은 유엔 중심 다자주의, 국제법 준수, 자유무역 수호를 강조하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명시적으로 지지했다. 메르츠 총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전방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의 심화”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메르츠 총리는 리창(李强)총리와 중·독 경제자문위원회 좌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보조금 지급,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업 간 경쟁은 공정해야 하며 투명성과 공동 규칙 준수가 필수”라고 경고하며, 2025년 독일의 대중 무역 적자가 약 900억 유로에 달하고 제조업 일자리가 매월 약 1만 개씩 감소하는 현실을 들어 “이 불균형은 건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의 중국에 대한 협력 의지와 디리스크링(de-risking) 원칙의 병행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미-유럽 긴장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

이 회담의 지정학적 배경은 미-유럽 관계의 구조적 긴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위비 분담 압박, 그린란드 관련 요구 등은 유럽에 직접적 도전이었다. 2026년 2월 뮌헨안보회의(MSC 2026)의 보고서 제목 ‘파괴 중’(Under Destruction)은 국제 질서의 붕괴를 공식 진단했으며, 메르츠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패권 추구 세력이 국제 질서를 자국 방식으로 재해석한다”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자주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말 에마뉼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2026년 초 키어 스타머(Keir Rodney Starmer) 영국 총리 등에 이은 최근 G7 정상급 방중으로, 시진핑 주석은 유럽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하며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유럽은 미국 의존도를 분산하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재건하려는 전략적 재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린란드 사태 당시 트럼프의 보복관세 위협(최고 25%)에 EU는 2023년 발효된 반강압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를 검토·활용해 대응했으며, 이는 관세 철회로 이어졌다. 유럽의회는 기술 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 결의안을 통해 공공조달 유럽산 우대와 반도체·클라우드 육성을 추진

하고, E6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보·경제 정책 결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과의 불협화음 속에서 “유럽 문제는 유럽이 해결한다”는 위기 의식의 구체적 산물이다.

그러나 독일·유럽의 ‘중국 중심축 이동’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메르츠 총리는 이번 방중 자리에서 양국의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도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영향력 확대와 불공정 경쟁을 지적하며 인식의 간극을 확인했다. 중국은 “발전 기회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조적 개혁(보조금 철폐, 시장 접근성 확대)에서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헤징 수단(hedging instrument)’으로 활용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균형(strategic balancing)으로 요약된다. 이는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다각화(diversification)와 디리스크잉을 추구하는 현실적 선택으로 비춰진다.

우리도 다층적 파트너십 전략으로 경제안보 자강력 강화 모색해야

이번 독일-중국 정상회담은 한국 외교에도 교훈을 준다. 미국 중심 동맹을 확고히 하면서도 다층적 파트너십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는 것이 21세기 중견국 외교의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균형외교 기조 아래 경제안보 자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EU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유럽의 자율성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EU, 프랑스, 독일 등과의 정례 정상회담을 확대하고 AI, 휴머노이드 로봇, 바이오, 반도체, 우주 분야 협력을 심화하며, EU의 기술 주권 법안과 ACI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우리의 대응력을 기반으로 양국의 공급망 안정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협력은 우리의 반도체·중간재 수출 시장 다변화와 규칙 기반 질서

참여를 동시에 달성할 기회를 높일 수 있다. 둘째, G7+ 공급망 안정 워킹그룹이나 중견국 경제안보 포럼(Middle Power Economic Security Forum)을 제안해 다자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2026년 한중 정상회담의 신뢰 회복 모멘텀을 살려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와 북핵·서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제안보·공급망·기후 환경 등 기능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한일 공급망 협력 강화와 우리의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 구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2026년 독일-중국 정상회담은 대서양 동맹의 균열 속에서도 유럽이 중국을 대체 옵션으로 활용해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법제화, 유럽·일본과의 기술 동맹 강화, MIKTA·QUAD 옵저버·G7+ 확대 등 중견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21세기 중견 강국으로서 국제 질서 재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국익을 극대화하는 장기적 비전이다. 미-중 경쟁의 격랑 속에서 한국 외교의 성숙도가 시험대에 오른 지금, 냉철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